

동북아 의료허브, 꿈★이 이루어질까?



글·손 종 관 |
메디칼업저버 편집국장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의 우수한 병원을 유치하여 동북아 의료허브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지난 10월19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관련 토론회에서도 확인됐지만 영리법인이나 내국인 진료 허용 등 각종 현안들이 각계와 이해당사자들이 사안마다 부딪히는 사공많은 배가 되면서 어느 학자나 정치인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상황과 같은 조건에서는 어느 외국병원도 우리나라에 상륙할 계획이 없고,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다수 외국의 유능한 의사가 진료에 참가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쌀시장 개방 문제에 있어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들이 직접 시민단체들과 함께 반대에 나선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에 진입하는 의료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 모두 ‘역차별 금지’ 등 비록 조건을 달았지만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집단이 찬성 목소리를 점차 높이는 것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는 어떻게 해석할까.

이를 두고 의료계 한편에서는 선진병원의 운영을 모델삼아 우리의 경색된 의료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임상수준에 있어서는 아시아권의 선두자리에 있는데다가 저렴한 진료비 탓에 경쟁력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있는 듯 하다.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병원 유치’는 결국 각종 제약을 풀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한보따리 안겨주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브랜드만을 빌린 ‘유치’라면 외국 의사 몇몇이 얼굴마담식으로 자리를 지켰다가 기간이 되면 되돌아가는, 생색내기에 불과할 것이다.

미국서 공부를 한 모기관의 단체장도 “당신이 유명한 미국 의사라면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타국민 진료를 위해 옮길 수 있나” 반문하고 “외국 의사는 소속기관과 개인에게 대단한 수익이 있으며, 복귀시 보직 등에 대해 분명한 ‘약속’이 있지 않으면 한국행을 택하지 않는다.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정부가 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한편에서는 “외국병원에 제안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정부의 정성을 우리 의료계에 베풀면 그 이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제특구에 외국병원을 유치하자는 것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해외 원정출산을 포함, 한해 1조원이 넘는 국부(진료비)가 유출되고 있다는 불확실한 통계가 하나의 배경이 됐고 싱가포르나 중국 등 경쟁국들의 외국병원 유치 선점도 크게 자극이 되었다. 게다가 동북아 중심국가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계획속에 포함되면서 적극 진행돼 갔다.

여기엔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앞장섰으며,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돌보는 보건복지부는 김화중 前장관 시절 수용 분위기였으나 현재는 심사숙고하는 모습이다.

재정부는 현재 경제특구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영리법인과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중국 등 동북아권 외국인 환자와 교육수요도 흡수 가능하며, 최단 시일 안에 의료수준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의료개방저지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의료를 양극화하고 공공의료와 국민건강보험의 위축으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도 두 핵심단체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찬반으로 나뉘어 부딪히고 있다.


한편 임상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병원들의 특구진출 논의는 상대적으로 이루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병원 유치’는 결국 각종 제약을 풀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한보따리 안겨주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브랜드만을 빌린 ‘유치’라면 외국 의사 몇몇이 얼굴마담식으로 자리를 지켰다가 기간이 되면 되돌아가는, 생색내기에 불과할 것이다.



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엔 미국에서 연구하고 진료했던 경험이나 명성이 높은 의사가 많다. 이들은 영어권 언어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고 아시아권 문화에도 익숙해 동북아 의료허브를 이끌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미 선두권에 있는 대형 의료기관이나 전문병원들은 외국 환자들을 불러들여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진료를 통해 미미하긴 하지만 경영에 도움을 받고 있다.

서울의대의 한 교수는 “필수적 의료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부가적이고 선택적 분야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의료를 산업 차원에서 접근하면 외국병원 유치에 오히려 우리 의료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취재를 하다보면 이같이 크고 작은 사안들에 대해 팽팽한 입장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환자를 보듯 전문 언론인은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고 비판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기자는 우리나라의 동북아 의료허브를 꿈꾼다. 2004